

‘姜 드라이브’ 순항하나 발목잡히나

■광주시의회 오늘 ‘민선 5기 조직개편안’ 처리

처리 결과에 따라 8월 대규모 인사 가능

강군에 광주시장 취임 이후 첫 작품인 민선 5기 광주시 조직개편안이 16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존 시 조직체계를 상당히 수정해 도시마케팅본부를 폐지하고 시민교통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로,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8월 중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시의회 중 개혁성향의 초선이 상당수인데다 이중 일부는 조직개편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선 5기 첫 단추를 끼는 조직개편안을 놓고 의회 내 치열한 논쟁도 예상된다.

공보관·감사관·인권담당관·일자리창출지원관·기업유치지원관 및 문

화수도지원관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계약심사과장 등 개방형 공모직위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로 신설되는 정무특별보좌관과 정책특별보좌관 등에 대한 상당 부분 논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역대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뚜렷한 반대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제동을 걸 경우 시민참여와 소통, 조직쇄신을 기치로 내걸고 출발한 민선 5기 시정에 대한 ‘발목 잡기’로도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만약 행자위 단계에서 조직개편안

처리 차질을 빚으면 이번 시의회 제190회 임시회 기간(7월6일~20일)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 경우 강 시장의 첫 단추인 8월 인사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은 15일 “아직까지 의원들간 조율은 없지만, 이번 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행자위 소속 의원들의 생각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시 조직발전에도 도움이 되는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감안해 소속 위원들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도시마케팅본부를 폐지하고 시민교통국을 신설하는 등 기존 2실 6국 2본부 44과 체제를 3실 6국 1본부 45과 체제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실·국 중 경제산업국은 경제산업정책실로 확대개편하고, 기획관리실은 기획조정실, 문화체육정책실은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사회복지국은 복지건강국, 환경녹지국은 환경생태국, 건설교통국은 건설방재국, 도시건축국은 도시디자인국으로 명칭을 바꿨다.

또한, 전국 최초로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인권담당관을 두는 것을 포함해 노인장애인복지과, 도시재생과, 교통시설과, 도로과 등 7개 과를 신설하고, 녹색성장담당관과 노인복지과, 민주정신선양과, 문화예술과, 광역스포츠팀단, 국제협력과 등 6개 과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안 울도는 에덴 동산!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 눈길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가족들과 함께 신안의 한적한 섬에서 여름휴가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가족과 함께 최근 2박 3일간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울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다. 이사장은 천연의 해수욕장에서 누드 해수욕을 즐기고, 섬주민과 그물질해 잡은 물고기를 모닥불에 구워 식사를 대신 하기도 했다.



한국관광공사 이참(오른쪽) 사장이 최근 ‘비파섬’으로 이름난 신안군 지도읍 울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이 울도에 친환경 관광수목원을 조성 중인 이명중 아일랜드(주) 대표와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kwangju.co.kr

울도는 총면적 43만㎡(13만평)로 주민 이정만(76)씨만이 살고 있는 작은 섬이지만 해안 경치가 빼어난 곳이다. 폭 20m·길이 200m의 천연 해수욕장과 갖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 휴양지다. 무안 운탄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15분 거리에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자체 개발한 제주도 중문 등 국내에 많은 휴양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참 사

장이 울도를 찾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도는 지난 2004년부터 무안해제 출신인 이명중(55) 아일랜드(주) 대표가 200억원을 투입해 관광수목원으로 한창 조성 중이다. 비파나무가 많아 ‘비파섬’ 또는 ‘에덴동산’으로 불린다.

특히 조랑말과 미니 돼지·공작새·원숭이·흰색 꿩·꽃사슴 등 15여종 동물을 자연상태로 방사하고, 350년된 바오밥 나무와 비파나무 등 1300여종의 나무를 심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해양관광타운·금형·친환경 농수산물 가공기업

투자협약 체결

2010. 7. 16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5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해양관광타운·친환경 농수산물 가공기업인 금오자원개발(주), 에이테크솔루션(주), (주)팜스그린코리아, 해청식품(주), (주)GE 워터스 등 5개 기업과 833억원 상당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금오자원개발은 전남군 문내면 우수영리내 1만1079㎡ 부지에 580억원을 투자해 호텔, 해양레스토랑, 해양체험시설 등 해양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한다. (왼쪽부터) 김유성 해청식품 대표, 류규자 (주)팜스그린코리아 대표, 김명렬 (주)GE 워터스 대표, 유영목 에이테크솔루션(주) 대표, 박준영 지사, 박래복 고흥부군수, 김양수 장성군수, 정인화 여수부시장, 허영철 전남부군수 등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완전 폐지해야”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 갑)은 15일 국경 농단과 국기 문란으로 각종 의혹을 낳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에서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실의 1급 실장 이하 3국 9개과 100여명의 직원이 정부정책 평가를 전담하고 있어 공직복무관리실과 업무가 중복된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공직복무관리실로 명칭을 바꾸는 이번 개편은 영포게이트를 무마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촛불 정국과 시민사회,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필요성 때문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부활했다”며 “불법 행위를 일삼고 직무도 중복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그리고 2011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우리 지역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원 지식경제위원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절단단지 내 광산업 및 로봇산업 전문기업들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본 뒤 하반기 국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전문병원 전면 재검토”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문상필 의원(민주·북구 3)은 15일 “광주시가 추진하는 어린이 전문병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퇴행성 관절 전문병원의 공공성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사회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이 많고 의료 과잉 공급 지역임에도 구체적인 필요성이나 수급 계획에 대한 판단 없이 어린이 전문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국민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2012년 6월 준공 예정인 퇴행성 관절 전문병원의 소유권은 전남대병원에 귀속된다”며 “국비와 시비, 전남도비가 360여 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공공성 보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

민주당 김재균의원(광주 북)은 15일 신성장 산업현장인 광주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입주기업 현황을 보고받고 관련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해당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지역구 행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의 신성장동력인 광산업, 로봇산업 분야 전문 중소기업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생산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했다.

전남도 교육의원들 상임위 불참 결의

교육위원장 민주당 나눠먹기 항의

전남도의회 교육의원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소관 상임위원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교육위원이 아닌 민주당 소속 일반 도의원이 모두 차지한 데 대해 반발하며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상임위 과반수를 차지한 교육의원들이 이를 이유로 상임위 활동을 거부할 경우 교육위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 상임위 파행이 우려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의원 5명은 15일 결의문을 내고 “전남도의회는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을 동일한 자격으로 보고 원구성에서부터 특정 정당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과 간사 등을 독식했다”면서 “이는 교육위원이 상임위원회의 구성점이 되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9명으로 이뤄진 교육위원회의 경우 5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한 교육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거부할 경우 오는 19일부터 예정된 교육위가 아예 열리지 않을 수 있어 개원 초반부터 상임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제발 멈추기만 해도 땀귀쫓 마이녹실

마이녹실

마이녹실